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
EIB의 순환경제 가이드와 금융지원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	4
티B의 순환경제 가이드와 금융지원	6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7
--------------------	---



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장 명 화 (clarajang@kdb.co.kr)

- ◆ EU, 미국 등 주요국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및 추진
- ◆ 중국 등 신흥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이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
- ◆ 철강, 석유화학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당국과 업계가 공조하여 국가 차원의 통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

□ EU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누출*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(CBAM :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의 도입을 추진

* 탄소누출(Carbon Leakage) :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원이 이동하는 현상

- ‘탄소국경조정’은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논의 시작
 - ‘탄소국경세’는 전지구적인 탄소감축에 대한 무임승차를 차단하고 탄소배출원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‘오염자부담원칙’에 따라 탄소비용을 고려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서 대두
 - 최근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50유로에 육박하면서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타국의 제품에 비해 자국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, 유럽내 산업단체들의 탄소국경세 도입 요구가 급등
- EU는 ‘21.6월 CBAM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‘23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
 - 유럽의회는 3.10일 CBAM 도입 결의문을 통해 “EU에 수입되는 상품과 재화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EU온실가스 배출의 20%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EU의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”며 WTO규율과 EU의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한다는 전제로 CBAM 도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
 - 관련 업계는 EU가 시멘트 등 산업과급력이 적은 분야부터 이를 우선 시행한 후 석유화학, 철강 등 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갈 것으로 관측

□ 미국이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복귀함에 따라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도 가속화

- 미국은 최근 탄소국경세 제도 검토를 공식화하였으며, EU와 협의하여 도입 추진 예정
 -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탄소집중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조정 수수료나 쿼터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
 - 지난 5.18일 미 기후특사 존 케리는 미국 정부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고 EU와 협의하기로 합의했음을 환기
 -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협력체제에 복귀하면서 EU가 홀로 입법을 준비 중이던 탄소국경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구체화될 전망
- G7 국가 중 영국과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6월에 개최될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

□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우려와 탄소측정에 대한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화
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,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게 되는 이른바 '녹색보호주의'에 대한 우려도 동반 증가
 - '21.3월 유럽의회가 채택한 CBAM 도입 결의문에서 EU의 ETS* 내 탄소누출 위험이 큰 산업(시멘트, 철강 등)의 역내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유지를 시사**해 EU 기업에 대한 이중보호가 될 수 있다는 교역국의 우려를 자극
 - * ETS(Emission Trading System) : 배출권거래제
 - ** '21.2월 환경위원회의 결의문에 있던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
 - 탈탄소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
 -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
- 기술적으로는,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 부재 및 탄소량 측정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,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 예상

□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으로, 업계와 공조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및 산업계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 노력이 시급

- 탄소국경세 시행시 국내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, 석유화학, 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은 생산과 수출 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
 - 추가될 관세 규모는 '23년 6,100억원, '30년에는 1조8,700억원에 달할 전망으로 철강 수출액의 10% 이상, 석유화학은 5%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부담 예상*
 - * EY한영회계법인, 그린피스코리아(2021.1), "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"
- 국가별·업체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과급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
 -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 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하여, 교역국 앞 탄소국경세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 후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
 - 국가 차원에서 EU 및 관련 추진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, 당국의 탈탄소 노력과 기후변화 협력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응
 - 국내 산업계는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신속히 내재화해 나갈 필요

EIB의 순환경제 가이드와 금융지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현진 (maxnlio@kdb.co.kr)

- ◆ EIB는 순환경제 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 및 관련 사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'20.5월 'The EIB Circular Economy Guide(EIB 순환경제 가이드)'를 수립·시행
- ◆ EIB는 순환경제 전환을 지속가능성장 및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판단, '16~'20년 중 순환경제 관련 사업에 27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
 - 역내 정책금융기관(KfW, CDC 등)과 공동으로 '23년까지 100억 유로 투자 계획

□ 유럽투자은행(EIB, European Investment Bank)은 EU의 순환경제*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'20.5월 'The EIB Circular Economy Guide(EIB 순환경제 가이드)'를 발표

* 기존 투입-생산-사용-폐기의 선형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, 제품 및 자원의 수명 연장, 폐기물 최소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모델

- 자원 수입비중이 높은 EU의 경우, 글로벌 인구 증가 및 개발도상국의 구매력 향상에 따른 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자원 가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의 차원에서 순환경제 전환의 필요성 확대
 - EIB는 순환경제가 자원 의존도 경감, 혁신 자극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여 관련 투자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
 - 이에 순환경제 가이드는 EU집행위원회의 '신순환경제실행계획'*을 지원하고, 순환경제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관련 사업 촉진 등을 목표로 설정
- *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, '20.3월 발표된 유럽 그린딜의 후속정책으로,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(친환경 제품설계, 소비자권리 강화 등), 산업별 전환시책 및 폐기물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
- 순환경제 가이드는 순환경제 전환 추진 시 역내 기업들에게 다양한 사업적 기회 및 일부 위험요인이 상존함을 명시
 - 자원의 가격변동 위험 감소, 재활용을 통한 제조비 감소,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및 설계·제조, 사용, 가치 회복 측면의 사업영역 확장을 기회요인으로 파악
 - 초기자본 투입, 생산공정의 변경, 직원 재교육 문제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며, 민간금융의 단기수익 추구 및 위험 기피 성향에 따라 공적금융의 지원이 필요

□ EIB는 순환경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, 동 카테고리 해당 사업에 대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

- 순환경제 가이드는 지원 사업의 적격 여부 판단 및 선별을 위한 14개의 순환경제 카테고리 제공
 - 카테고리 해당 시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나, 기업 실사를 통해 현금흐름 안정성, 자원 확보 가능성 등 발생가능 리스크를 병행 고려

순환경제 전환 사업 선별을 위한 카테고리

구분	내용
설계 및 제조 (Circular design and production)	① (i) 자원의 효율성, 기능성 등의 향상 및 (ii)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기반으로 제품 설계 및 생산
	② 생산공정의 기술 발전
	③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신규 자원(바이오매스 등)을 이용한 제조
	④ 인간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문제 자원의 대체 또는 상당한 감소
	⑤ 기존 원재료를 2차 원료(재활용된 자원) 및 부산물로 대체
자원 사용 (Circular use)	⑥ 동산(제조설비 등)의 재사용, 수선, 목적 재설정, 개조 등
	⑦ 부동산(산업설비, 건물, 인프라)의 목적 재설정, 개조 (ex. 재활용 등이 가능한 건축자재 활용)
	⑧ 리스, 구독, 공유 등 제품의 서비스화(Product-as-a-Service)를 통한 자원 사용
	⑨ 오염된 산업부지 재건
가치 회복 (Circular value recovery)	⑩ 운송수단, 임시저장소 투자 등 폐기물 수거 및 제품의 역물류 지원
	⑪ 수거된 폐기물에서 자원의 보유가치 회복
	⑫ 바이오매스 폐기물의 재활용 등
	⑬ 폐수의 재활용 및 재사용
기타 지원 (Circular support)	⑭ 순환경제 전환 지원 수단(ex. ICT, 디지털, 2차 원료 등의 시장조성, 기업 자문서비스 등)

자료 : European Investment Bank(2020.5), "The EIB Circular Economy Guide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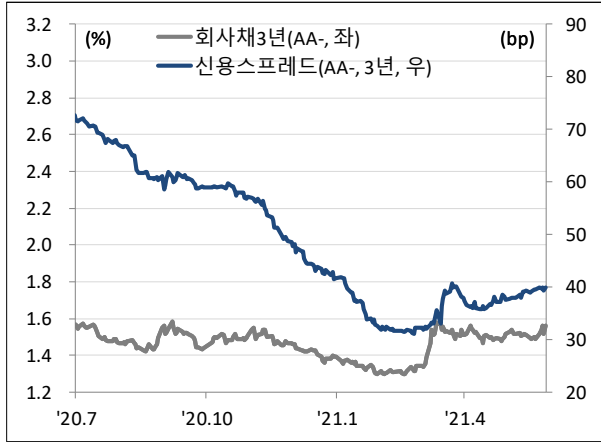
- EIB는 순환경제 전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대출, 온렌딩, 펀드 운영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
 - EIB는 '16~'20년 중 순환경제 관련 사업에 27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, 분야별 지원 비중은 산업·서비스(36%), 농업·바이오(20%), 폐기물 관리(17.5%), 물 관리(13.5%), 운송(5%), 도시발전(5%), 에너지(3%) 순

□ EIB는 지속가능성장 및 EU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역내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순환경제 관련 투자를 지속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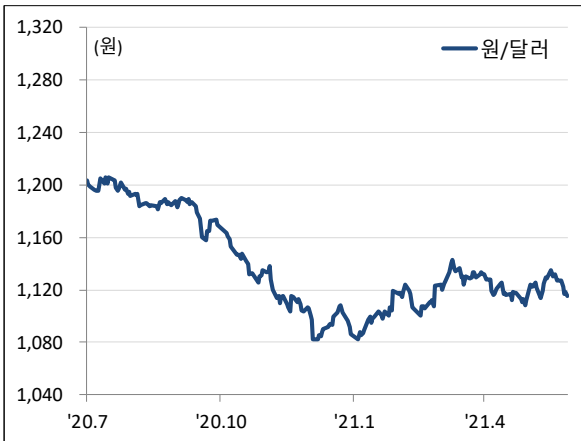
- EIB는 '19.10월 역내 정책금융기관*과 함께 순환경제공동계획(Joint Initiative on Circular Economy)을 발표하였으며, '23년까지 공동으로 1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
 - * KfW(독일), CDC(프랑스), CDP(이탈리아), ICO(스페인), BGK(폴란드)
 - 농업, 산업·서비스, 도시발전, 폐기물 및 물 관리 등 분야에 대출, 지분투자, 보증 및 자문서비스 등 제공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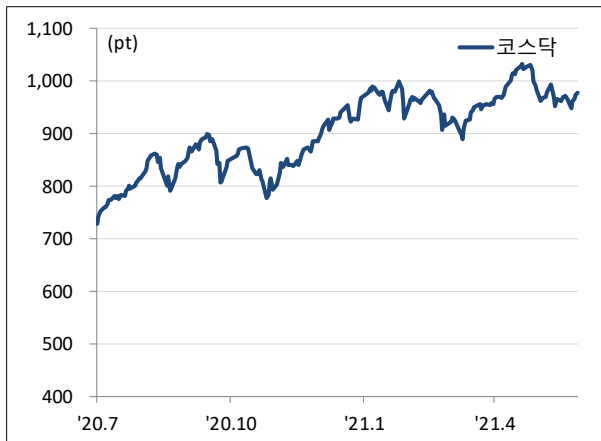
금리 국고채3년 1.162% (6.7bp ↑), 신용스프레드 39.9bp (0.3bp ↑)



환율 원/달러 1,115.5원 (11.5원 ↓), 엔/달러 109.87엔 (0.93엔 ↑)



주가 코스피 3,188.73pt (1.02% ↑), 코스닥지수 977.46pt (1.23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29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
문의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 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